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국 성인 인식조사

■ 김희연*

1. 개요

EU의 GDPR 시행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및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이 시행될 예정으로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2019년 6월 3일부터 17일까지 4,272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들은 수많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자신의 활용 및 활동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환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고, 또 때로는 공공의 안전과 보안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kimhy@kisdi.re.kr, 043-531-4332

개인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미국의 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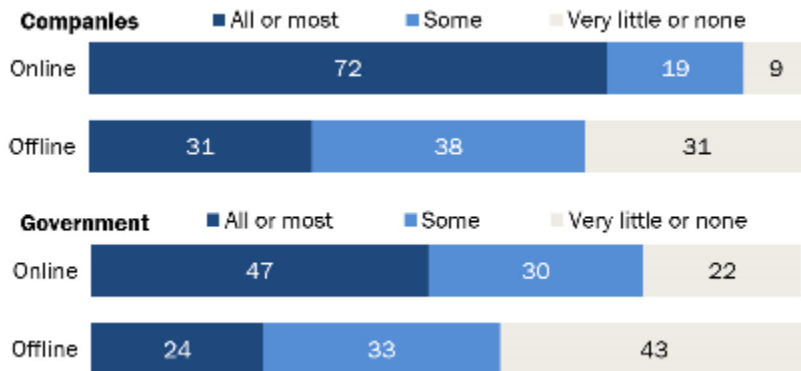
·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우려**

응답자들의 79%는 그들에 대해 기업이 수집한 정보의 양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64%는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수집한 정보에 대해 개인들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개인의 온라인 활동정보 추적 우려**

미국 성인들은 그들이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 추적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이 수집하는 온라인에서의 활동 정보가 모두 또는 거의 추적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72%에 이르며, 정부가 수집하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정보가 모두 또는 거의 추적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7%에 이르렀다.

[그림 1] 개인의 온라인 활동정보 추적 우려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11. 15)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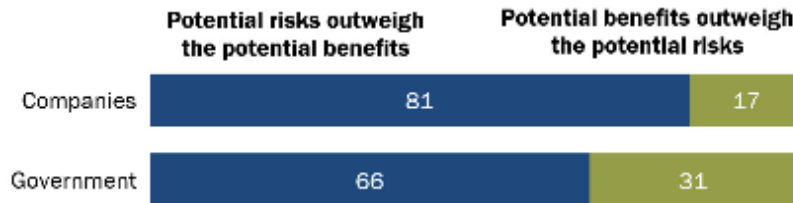
응답자의 97%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동의하기 전 그 내용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읽는

다'고 응답한 경우는 9%, '가끔씩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3%에 불과하며, 36%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의 잠재적 위험

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잠재적 이익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1%는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잠재적 이익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66%는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잠재적 이익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2] 개인정보수집의 잠재적 위험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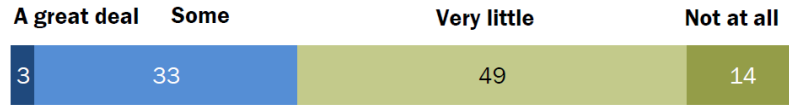
·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개인정보 통제권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의 통제권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이며,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81%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정부 규제의 필요성

현재의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만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63%는 전혀 모르고 있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존의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정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 75%가 찬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3]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11. 15)

[그림 4] 기업의 개인정보활용 규제 필요성



자료: Pew Research Center(2019. 11. 15)

3. 결 어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의 온라인활동 정보 추적가능성, 개인정보수집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제공등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재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11월 18일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되어야 할 우선순위 원칙(Privacy and Data Protection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원칙은 데이터 보호 수단의 확립, 경쟁촉진, 소비자 및 시민의 권리 확보,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Senate Democrats, 2019. 11. 18).

먼저, 데이터 보호 수단의 확립과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 최소화와 오남용 방지, 데이터 공유 제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경쟁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기업내부에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데

이더 이동의 재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 및 시민권리 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데이터 전송에 대해 알 권리, 열람삭제수정제한 권한, 온라인 데이터 추적 거부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이의제기권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기업에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권한과 각종 규칙 제정 권한 등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대한 권리도 필요하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의 상당수가 더 많은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향후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시행 이후 연방차원의 단일한 규제체계 확립 등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참고문헌〉

- Pew Research Center (2019. 11. 15), *Americans and Privacy: Concerned, Confused and Feeling Lack of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 Senate Democrats (2019. 11. 18), Privacy and Data Protection Framework.